

종전선언 참여 의지를 선명히 하였다. 그리고 8월 17일 베이징에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단을 접견한 장예쑤이(張業遂)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은 종전선언 참여 입장을 명확하고 확실히 천명하게 된다.²⁸⁾

2018년 7월 2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같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이라고 강조한 점, 8월 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에서 중·남·북·미 4자 외교장관 간 교차 회담이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문제가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셋째, 중국은 다자간 협상에 의한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밝혔다. 핵을 포기한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의 불행한 죽음,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란핵협정 파기 등 사건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을 증폭시켰다. 비핵화에 임하는 북한의 우려를 감소하고, 평화협정 체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며, 평화협정 체제의 정당성,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국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의 6자회담 참여국들이나 나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이 참여하는 다자 보장 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2019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고, 2019년 4월 2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한 후 한반도 문제에서의 다자간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2019년 5월 13일, 왕이 중국 외교 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소치에서 가진 회담에게 대북 체제 안전보장 논의를 위한 6자회담과 같은 다자 틀의 필요성을 거론 하였고 이에 대해 경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의 대화 정세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관련국과 함께 비핵화와 정치 해결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해 긍정적인 성과를 얻기를 희망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넷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중국은 냉전의 유산인 주한미군 문제도 포함하여 같이 해결해 나갈 의사를 언론을 통해 보여주었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유엔사의 성격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한미군 주둔은 정전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10월) 체결을 근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존재가 결코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하여 다룰 수는 없는 것이다. 2018년 6월 12일 자 <환구시보>는 ‘주한미군 문제는 막을 내려야 한다’는 칼럼을 등재하고, 미군은 북-중의 철수 요구를 거부한 채 한국에 장기주둔하면서 “중국 철군 60년은 미군 주둔 강화 60년이 됐다”면서, 진정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선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

28) 《韩民族报》, 2018年8月17日,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858048.html#csidx764114d6c4e200f92067cd458b23d27>

고 주장했다.²⁹⁾

중국의 입장에서는 긴장 완화와 평화를 향한 한반도 상황 전개에 맞추어 주한 미국의 철수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냉전적 이념과 군사적 대립을 전제로 한 유엔사의 성격 변화를 주문 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의 타협을 도출해 냄으로서 주한미군의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학계와 언론의 보도에서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한 점, 이에 대해 미국 상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막는 법안까지 발의된 점³⁰⁾, 한국 여론에서도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국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의제 설정이 관련국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맺는 말

2018년 한반도에는 대화와 협상의 시대를 열었고 전쟁 위협은 현저히 감소했다. 중·남·북·미 4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했고 뜻깊은 성과를 이뤄냈다.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며 남북 간의 적대적 분단 관계가 사실상 종식 단계에 들어섰고, 70년 만에 처음 열린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하였다.

중국은 북미,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의 구축을 통하여 비핵화와 평화협정체제 등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룩하려고 노력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 9월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EEF) 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하였고 2018년 1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현 단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중점을 두고 신형대국 관계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과의 공동 견해를 강화하고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는 전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있어 중미 간 협상에 필요한 의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며 관련국과도 논의해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음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관한 중미 간의 인식 차이는 많이 좁혀졌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이슈에 있어서도 정책 의제 설정과 논의

29) 《环球时报》2018年 6月12日。

30) 《MT新闻》, 2018年6月14日,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1411402934371&outline=1&ref=%3A%2F%2F>

가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중미 간 신형대국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창출 해왔다. 2012년 2월 제안 당시만 해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낱 구상에 불과했던 ‘신형대국관계론’도 이론적, 실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4자 간 종전선언’에 대해 남북한의 이해를 얻어 낸 것, ‘쌍중단·쌍궤병행’의 경향이 2018년 한반도 현실 정세에 나타난 것, 북한의 체제보장 논의가 북미 간에서 이루어진 것 등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놓고 보면 모두 의미 있는 성과였다.

하지만 2018년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비핵화 협상은 2019년 2월 27-28일에 열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과 2019년 5월 4일에 발생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침체기에 들어갔다. 한편, 2019년 5월 10일에 열린 제11차 중미 고위급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미 무역 전쟁은 장기전에 진입하면서 중미 관계도 급격히 악화 되었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협상 과정에서 중국을 위협하면서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협상안을 강요하자 중국은 이에 반발하면서 대미 강경책을 구사했던 것이다. 무역협상에서의 트럼프 정부의 행태는 중국이 제안해온 신형대국관계론이 주장하는 평등, 상호존중, 윈윈 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의도와 입장을 선명히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북미 관계, 중미 관계의 악화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동력을 잃어가고 한반도 문제에서의 ‘신형대국관계’ 구축도 난관에 봉착해 있는 현실 속에서 중국은 아래와 같은 5가지 점에 주의하면서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에서 돌발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신형대국관계’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정책을 추진할 지도 모른다. 남중국해에서의 중미 군사적 대치는 강화되고 있고 특히 내년은 대만 총통 선거가 있는 한 해여서 미국이 대만카드를 쓰기 쉬운 상황이 만들어졌다. 한편 시진핑 정부의 대만 정책도 ‘현상 유지’에서 ‘통일 촉진’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2019년 1월 2일, 시진핑 주석은 평화통일을 촉구하는 ‘타이완 동포에 보내는 메시지告台湾同胞书)’ 발표하면서 외부세력 간섭을 반대하고 통일을 위한 무력사용을 포기 않을 것을 명확히 밝혔다. 무역 전쟁에 이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도 중미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남중국해에서의 중미 갈등의 여파는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으로 영향 줄 것이다.

둘째, 신형대국관계’ 확립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잠재우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중국이 원하는 ‘윈윈’의 ‘신형대국관계’ 구축 까지는 더 많은 협상과 대화가 수요 될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고, 공동의 책임을 지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핵심이익과 원칙은 지키는 것이 속도보다 중요하다. 한편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확고부동하게 자국의 길을 걷고 착실하게 자국의 일을 잘 처리하여 중국인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³¹⁾

셋째, 포스트 트럼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인식과 감정적인 중국 정책, 그리고 불안정한 정책기조는 신임을 주기에는 역 부족하다. 트럼프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은 힘들 뿐만 아니라 설령 합의점을 찾는다 해도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포스트 트럼프 시대가 1년 후가 될지도 5년 후가 될지도 모르지만, 신임이 가지 않는 트럼프 정부와 신형대국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트럼프 정부를 상대해 나가야 다음 정권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마인드로 변화된 것이다. 타협책을 선택하든 강경책을 선택하든 그 목적은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더욱 건설적인 중미 관계를 위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은 중국에게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중미 간 ‘협력적 경쟁’ 관계에 관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협력적 경쟁’ 관계는 상호 간 이익이 얹히고섞힌 관계로서 협력과 갈등 요인이 널리 분포되어있다. 이러한 경우 한 분야에서의 양보가 또 다른 분야의 양보로 이어질 수 있어 쉽게 타협을 못하는 딜레마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무역 갈등에서의 타협은 한반도 문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핵심이익에서의 양보는 더욱 국가의 미래 발전에 영향을 줌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한편 한 분야의 긍정적인 영향이 다른 분야 영역에 쉽게 전파 전파될 수도 있어 의견의 대치 상태에서 국면 타파에 효과적인 타결점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한국의 입장과 선택에 주목해야 한다. 화웨이 사태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선택이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중미 갈등에서의 한국의 입장 또한 관건이다. 중국과 미국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양국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 되었을 때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중국은 실용적 관점에서 한국이 취해야 득이 되는 방향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익을 취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틈새 외교’임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가야 한다.

한편 한국은 현재 중미 간 관계의 발전 방향과 중국의 대국 굴기에 입각한 주변국과의 새로운 관계설정 그리고 남북관계발전, 평화체제 정착, 북핵 문제 해결 등의 어려운 과제를 한 몸매에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도 안보에선 여전히 동맹으로서의 미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 딜레마에 처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중국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늘려가는 데 비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오히려 그 비중을 줄이려 하고 있어서 변화하는 지역 질서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한국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한중교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드 사태는 한중 간의 정치, 외교, 문화 각 분야에서의 교류 채널이 턱없이 부족하며 있더라도 해도 관계(曄曄关系)가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기반으로 한 한중간 담론의 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입장 분석과 함께 무엇을 우려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31) 刘华：“新时期中国周边安全环境评估”，《钱江论坛2019年度会议论文集（2019年2月）》，第87页。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서방(미국)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언론 환경, 학계 분위기를 바꿔 나가야 할 것이며 중국의 의식구조, 문화 코드, 철학, 판시의 사회관계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 유학경험이 있는 한국인 전문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국제학술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제언

[세션 2 : 동북아 평화체제와 미중의 대 한반도 전략]

토론문

| 지정토론 : 최희식 국민대학교 교수

동북아 평화체제와 미중의 대 한반도 전략 토론문

최희식 (국민대학교 교수)

1. 유예된 미일 경제 마찰(5.27 미일 정상회담)

○ 미일 동맹 긴밀화

납치문제에의 협조

대북 정책 공조. 5.9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온도차.

○ 한국문제 언급 없었음

- “양 정상은 미일인, 미일호, 미일호인을 포함하여, 지역 동맹국·우호국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확대해 갈 것에 일치했다.”

-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 없었음.

○ 2018년 9월 26일 미일 공동성명의 유예

- 일본의 무역적자 삭감 강조

“미일 간의 무역·투자를 호혜적인 형태로 확대”

- 미일 자유무역협정

“소여의 국내조정을 거친 후, 미일 물품무역협정(TAG)에 대해 또한 다른 중요한 분야(서비스를 포함하여)에서 조기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교섭을 개시한다.” 다른 무역·투자, 농산품과 자동차 산업.

○ 5월 정상회담 관련 트럼프 트윗

‘많은 부분은 일본의 7월 선거 이후까지 기다릴 것이다. 거기서 난 큰 숫자를 기대한다’

2. 트럼프의 상인적 리더십과 아베의 현실주의 리더십 그리고 중일관계 및 한일관계

○ 트럼프: 상인적 리더십

- 2020년 재선을 목표로 모든 목표를 경제적 이익에 집중

미중 경제 마찰, 동맹국에 대한 무역역조 해소 및 방위분담금 증액 그리고 무기구입

- 남북미관계와 한미일관계의 효율적 이용

북한과의 상호공존을 추구하는 한국에 대해 북미관계를 지렛대로 현실적 이익의 취득(방위비 분담금, 한일 FTA 재협상 등).

한일 갈등에 대한 상인적 접근: 트럼프는 진정 한일 간 갈등완화를 원하는가? 파국이 아닌 이상, 갈등의 상업적 이용을 추구? 기본적으로 한일 갈등은 공유된 동맹국인 미국의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부담공유(burden sharing)를 추구하는 트럼프에 좋은 기회로 인식될 가능성 존재. 한일 갈등의 적극적 중재를 통해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이전 정권과 달리, 상인적 리더십을 소유한 트럼프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아베: 현실주의적 리더십

-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대한 헛징전략: 중일관계, 러일관계

유예된 미일 경제마찰을 염두 해 두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일대일로와의 적극적 협력 모색, 국제자유주의 유지를 위한 중일 협력).

한일 역사갈등을 염두해 두고, 한중 역사연대 봉쇄(중일 화해의 부수적 효과? 박근혜 정부 시기의 한일 역사갈등에 대한 학습효과?).

- 참의원 선거를 앞둔 현실주의 리더십

북일 대화의 모색(납치문제)

한일 갈등의 방치

- 보수 일본의 정치감각

중요하지만 지지기반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이슈를 실행하기 전 혹은 실행한 후에, 지지기반을 강화할 보완적 행위를 실시.

ex) 고이즈미 시기: 북일 정상회담 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오부치 시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후에 국기·국가법 통과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국제학술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제언

[세션 2 : 동북아 평화체제와 미중의 대 한반도 전략]

토론문

| 지정토론 : 이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동북아 평화체제와 미중의 대 한반도 전략 토론문

이우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1. 하노이 북미회담의 의미

-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의는 물론 협상 목표에 대한 상당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
 - 미국은 북한에게 빅딜을 제시하였고 북한은 미국에게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요구한 점을 볼 때 양국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줌
 - 미국에게 대북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적 레버리지이나 북한은 이러한 미국을 상대로 일정 부분의 시설 공개에 따른 제재해제를 요구하여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함
 -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국이 목표로 하는 완전한 핵 폐기는 어렵고 북한의 핵무기 및 시설에 대한 일부분 폐기만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함
 - 즉 양국의 비핵화에 대한 정의, 그리고 협상 목표가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협상에서도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줌

2. 향후 미국의 대북 협상 의지

-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을 속이려 한다는 인식 또는 진정성 있는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으나 향후 북한과의 협상 자체를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하노이 회담 결렬 당시는 물론 지난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적인 협상 가능성을 언급함 (북한 역시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제의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 5월 4일 발사된 북한의 '신형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미국은 탄도미사일임을 인정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위반임을 언급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발사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며 이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고 전혀 신뢰 위반(breach of trust)이 아니다"라고 밝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기 위해 노력함
 -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 조치로 평가'하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회담의 재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도적 지원

을 평가함

- 6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영철의 처형설 관련 언급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혀,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음

3. 미국의 대북정책 Priority 변화 변수

가. 국제환경: 중국/베네수엘라/이란

- 최근 미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근거한 대 중국 정책 대신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마찰도 불사한 새로운 대중 정책을 펼치기 시작
 -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환율문제서부터 화웨이 사태까지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대립정책 노선을 확대하고 있음
 - 대만 문제에서도 미국은 대만 독립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시작하여 중국의 'One China' 정책에 제동을 걸기 시작함
 - 남중국해에서도 중국 견제를 위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최근 미국에게는 북한보다 베네수엘라나 이란 문제가 더 시급한 외교정책으로 부상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이란핵협정을 파기했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하며 이란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진행 중이며 최근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정권교체 시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함
 - 미국은 베네수엘라 사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군사봉기'를 촉구하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의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를 지지하는 뜻을 밝힘

나. 국내환경: 선거

- 미국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또는 공화당의 재집권을 위해서는 외교정책의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도래
 -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8일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며 민주당 계열의 대선 예비후보들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주요 선거 이슈로 다룰 예정임
- 미국이 현재 처해있는 국제환경과 국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적어도 2019년 상반기 안에는 제3차 북미협상의 재개 또는 실질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함
 - 시간은 미국, 북한, 한국 모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음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국제학술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제언

[세션 2 : 동북아 평화체제와 미중의 대 한반도 전략]

토론문

| 지정토론 : Zhang Muhui(장무휘) 부산대학교 교수

동북아 평화체제와 미중의 대 한반도 전략 토론문

Zhang Muhui 장무휘 (부산대학교 교수)

한반도의 미래 전망에 대한 중국의 입장

1. 중국(中國)과 북한(北韓)의 관계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또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중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의문은 큼니다.

먼저 부정(不定)적인 요소로는 더 강력해진 대북 제재(對北 制裁)가 있습니다.

중국은 2016년부터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대북 제재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결의안 2371호, 2375호, 2397호로 인해 중국은 북한산 석탄, 철, 해산물, 섬유 등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천연가스와 원유 수출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중국은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SC)의 북한 해외 노동자 억류에도 동의했습니다. 미국의 정부 기관들이 중국의 암묵적 원조에 나서는 선박들을 발견했음에도 중국은 대북 제재를 위해 국제사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일부 통계에 의하면, 중국과 북한의 교역량과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하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 긍정(肯定)적인 면으로는 양국의 정상회담이 빈번했다는 것과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북한 정상회담의 변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네 차례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극비에 방문했고, 안전하게 돌아온 이후에 북한 언론에서 이러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에는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접근하고 있어, 이전에 비해 중국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합니다.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정상들 간 개인적인 신뢰와 우정은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2년을 보면,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겉보기에는 견고한 대인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계속되는 중미무역분쟁(中美貿易分爭)

진행 중인 중국과 미국(美國)의 분쟁으로 인해, 중국이 북한 문제를 미국에 대한 가장 강력

한 협상 카드로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북한은 보다 긴밀한 관계를 이어갈 여지가 많습니다.

2. 이어 **중국과 한국(韓國)의 관계**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두고는 중국-미국-한국 3국의 관계를 우선 전망하고, 이어 남북 평화 국면에 따른 철도 연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국-미국-한국의 관계

중한 관계의 진화는 중미(中美) 관계의 변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2018년부터 무역 분쟁이 가속화된 이후 중국은 갈등을 빚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에 나선 점을 주목해 볼만 합니다. 중일(中日), 중한(中韓), 중필리핀(中Philippines) 관계는 이전에 비해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정책은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중국의 정책 전환을 분석하려면, 중미무역분쟁이 중한 관계와 중일 관계개선을 촉진시켰다고 여깁니다.

그 예로, 중국은 2018년에 사드 배치에 대한 정책 태세를 급격하게 바꿨습니다. 2018년 이전에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사드 문제에 대해 저자세(低姿勢)로 돌아섰고, 이는 이미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 기업과 한국 관광에 대한 국내 규제도 풀었습니다.

둘째, 한반도(韓半島) 철도(鐵道) 연결에 대한 중국의 기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이해하는 다른 관점은 남북 간 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중국의 연구소(研究所)와 학자(學者)들은 한반도 철도와 중국의 국내선 그리고 중국과 유럽의 철도(中欧铁路) 연결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북한의 개방과 중국-북한-한국으로 이어지는 철도 연결을 중국의 동북지역 경제발전의 기회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랴오닝성(遼寧省)에서는 랴오닝에서 부산(釜山)으로 이어지는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이 명확하게 포함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당연히 한반도의 평화적인 발전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위 원고의 영어 원문입니다.

A Chinese Perspective on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China-North Korea re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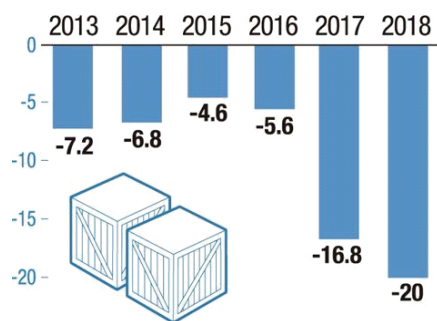
We may ask a simple question, that is, is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 improved or deteriorated in recent years. However,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answer. It poses a big question on how to assess the recent evolution of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 since 2018.

Pulling Forces: Tough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ince 2016, China has join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greed with tough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Resolution 2371, 2375, 2397, China agreed to ban all exports of coal, iron, seafood, textile, and put a stricter limit to NK's import of natural gas and crude oil. In the meantime, China also agreed with United National Security Council's resolution on restraining NK's overseas labors. Despite US intelligence agencies from time to time discovered Chinese vessels to give secret support to NK, in general, China has joined hand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sanctions against NK. Some statistics also show a drastic drop of China-NK bilateral trade and NK's GDP growth.

NK's trade balance with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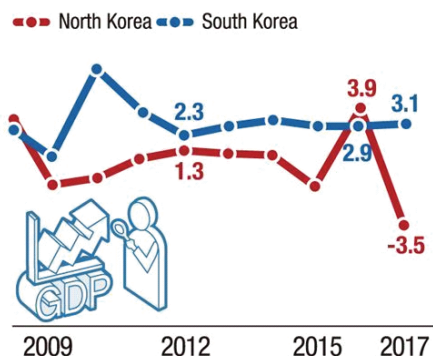
(Unit: \$100 million)



Sourc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GDP growth rate

(Unit: %)



Source: Statistics Korea

Pushing Force

Summit meetings. It should be noted that Xi and Kim had four summit meetings throughout 2018-2019. In the past days of Kim Jong-il, he paid secret visits first, and followed by media report after his safe return to NK. However, in Kim Jong-un's case, he clearly prefers a more open and transparent approach, indicating that he seemingly needs support from the Chinese government more than before. More importantly, the personal trust and friendship of political leaders in socialist countries (like China and NK) tends to be more important than that in liberal democratic countries. In recent years, Xi and Kim have seemingly shown the outside world that they two share a solid inter-personal bond.

Ongoing China-US trade wars. The ongoing US-China disputes may possibly lead to a closer China-NK relation, for which China can mobilize the NK issue as one of its strongest bargaining chips against US.

China-South Korea Relations

US-China-South Korea relations

The evolution of China-South Korea relation should be understood together with the change of China-US relation. It is noteworthy that since the breakout of US-China trade conflicts in early 2018, China has changed its policy towards many neighboring countries who are in disputes with China. The Sino-Japanese, Sino-Korean, Sino-Philippines relations (even the China-NK relations) have displayed a steadily upward trend. China's policy turn from passivism to goodwill towards Japan and Korea has been highly notable. To analyze China's 'unexpected' policy shift, we find out that the U.S.-China trade conflict is the major stimulant for the improvement of Sino-Japanese and Sino-Korean relationships.

For example, since 2018, China's policy posture on the THAAD deployment has undergone a radical change. In contrast to a tough stance of strong protests against Korea, China turned to a low profile on the THAAD issue throughout 2018 and 2019, and is seemingly accept the THAAD deployment as an already

‘establishment fact’. In the meantime, China also lifted its domestic restriction on Korean businesses and tourism to Korea.

China’s Expectation on the trans-Korean Peninsula Railway

Another perspective in understanding China’s future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is China’s increasing expectation on the trans-Korean railway. Increasing China’s think-tanks and scholars started to mention the vision of linking the trans-Korean railway with China’s domestic China-Euro railway (中欧铁路). Many consider the open-up of North Korea and the connectivity building of China-NK-SK as the biggest opportunit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s Northeastern region. For instance, Liaoning province even come up with a policy vision, in which a Liaoning-Busan railway and highway construction is clearly included. Thus, from this point, China still has a strong wish for the peaceful development of the Korean peninsula.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국제학술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제언

[세션 2 : 동북아 평화체제와 미중의 대 한반도 전략]

토론문

| 지정토론 : Фёдор Тертицкий(표도로 짜르치즈스키)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원

동북아 평화체제와 미중의 대 한반도 전략 토론문

Фёдор Тертицкий 표도로 페르치즈스키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원)

푸틴 정권의 대북 정책

푸틴 정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러시아는 암묵적으로 북한을 중국 영향권의 일부로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주장의 소개를 소개할 것이다.

북한 문제에 러시아의 친중(親中) 노선

러시아 정권의 대북정책을 보면 러시아는 중국의 입장을 거의 무조건 지지한다. 안보리에 투표는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협상이 있어서 진행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 러시아는 중국을 거의 무조건 지지한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외교부 단독 입장을 하는 것보다 늘 “중러 공동 해결책”을 내세우고 있고, 중국 측의 주장을 거의 예외 없이 지지한다. 또한, 러시아는 현재까지 중국 측의 입장을 비판해 본 적도 없고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발언까지 해 본 적은 없다.

러시아가 중국과 완전히 똑같은 입장을 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례는 북한 해외 노동자 추방 문제였다. 독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2017년 말에 안보리에 러시아는 추방의 데드라인을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2월로 연장하였다. 북한 노동력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도움이 되고 죄 없는 노동자들을 추방시키는 조치는 대단히 비도덕적이고 러시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도 러시아는 중국이 지지한 조치를 수정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이 이 유일한 사건 제외에 러시아는 모든 토론에 중국의 노선을 지지해 왔다.

미미한 북러 무역

북한의 대외 무역의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은 거의 독점적인 역할을 미친다. 통계에 따르면 북러 무역 북중 무역의 1.26%에 불과하다. 북러 경제 관계에 유일한 유의미적인 프로젝트는 ‘라진 하산 운송 프로젝트’였고, 이 프로젝트는 제재 면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었다.

러시아 정부의 북한에 대한 무관심의 이유

러시아의 자체성을 살펴보면 유럽 나라이다. 문화적으로 다른 유럽 나라들처럼 중화권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로마-유대인 문화의 계승한다. 인구 구성을 보면, 80%정도 유럽에서

산다. 러시아 매체는 친정부나 반정부 반향이 가지는지 상관없이 주로 유럽에 관한 사건에 대해 보도한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북한보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시나 유럽 연합에 대한 신경을 쓴다.

러시아 정부에 북러 관계보다 한러 관계는 중요하다

이 사실은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 북러 무역의 규모는 한러 무역 규모의 0.4%에 불과하다. 즉,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상당히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고 북한이 무시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의 동맹 국가 중에 러시아와 제일 가까운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2008년에 러시아-그루지야 전쟁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2014년에 양국 사이에 무비자 협정은 통과되었다.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미국의 거의 모든 동맹국과 같이 대한민국은 대러 제재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고맙다고 발언하였다.

푸틴의 개인적인 입장

본인은 정부의 관계자로부터 푸틴 자신이 북한 정권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들었다. 이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소련 시대에 북한이 자기선전 잡지를 소련에 수출해 페이지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크나큰 사랑’에 대한 언급이 있는 이 잡지를 본 소련 사람들은 북한을 ‘이상적인 독재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다. 역시 푸틴도 예외적인 사람이 아니다.

결론

유럽 나라인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큰 관심도 없고,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의 이유가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 우호가 러시아 정부의 전략적인 선택인 것이다. 북한과 같은 미미한 문제 때문에 중국과 갈등할 의지가 없어 중국의 입장은 거의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4자회담’ 모델은 원래 ‘6자회담’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처럼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대한 단독 입장이 없어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본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